

# 국가 정보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전무이사

##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

1993년말 수립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투자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이 지난 7월에 마지막해의 개발자가 선정되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시장 조성 및 활성화, 공공 부문의 정보 공개 촉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계획 수립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정책 사업이었다.

지난 4년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두 해는 텍스트 중심의 소형 데이터베이스 142종이 개발되었다. 특히 1995년도에는 현재 Infoshop의 HiWEB에서 Web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되고 있는 Web theater, Web College, Neo Gate가 이 때 시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선정되어 개발되었다.

나중 두 해는 이 3종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소형 텍스트 중심으로 부터 개발 과제를 모두 멀티미디어로 방향 전환하여 이 두 해동안 19종의 대형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자 선정, 표준 소프트웨어 선정, 유지 보수 문제 등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의 논란거리로 등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업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사업 개시년도에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일부 정부출연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700여종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0%가 공공 데이터베이스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에서 ORDBMS, 검색 엔진, CGI 등으로 구성된 표준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산정 기준의 확립 등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 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본다면, 사업 추진 구조에 내재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자금 지원과 개발자 선정을 하는 한국통신은 발주자로서, 민간 부문은 수주자로서 또한 과제 개발과 선정을 담당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방향 조정자로서 각각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상호 연동되지 못하였다.

특히 발주자 입장에 있는 한국통신이 공공 데이터베이스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한국통신이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 사업이 청사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이다. 4년간이라는 한시성과 갱신 유지 관리가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성간의 불균형,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결여 등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제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국내 정보 유통상의 문제점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원료에 해당되는 정보 자원, 특히 공공 부문의 정보 자원은 해당 기관의 폐쇄성이나 경직성으로 확보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민간 기관이 부가가치가 큰 정보를 창출하기 위한 중간재, 즉 체계화된 정보 자료나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점이였다.

### 선진국의 공공 부문 정보 유통 활성화 정책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찍이 공공 부문 정보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가용성(Availability)의 확립이 국가 경제 성장과 전자 민주주의의 열쇠라고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는 법률, 통계, 문화, 재정, 연구 등의 영역에서 공공 부문이 최대 정보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 행정 기관에 관보(Federal Register)로 기관의 조직, 기능, 정책 명령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1974년 선샤인법(Government in Sunshine Act)에서는 행정기관에 회의의 일정 등의 통지를 의무화하였다.

정부 정보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제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 정부

인쇄국 전자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법안(Government Printing Office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과 1995년 문서업무 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 등 중요 법안이 제정되었다. 작년에는 정보자유법을 개정한 전자정보

**국가 정보 자원 종합 관리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의 하나로 추진 조직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존의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素材)가 되는 정보 자원(Information Resources)의 조사와 디렉토리 구축, 이 정보 자원을 민간 부문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개 사업, 정보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도 모니터링 사업 등이 이 계획의 중추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을 통하여 정부의 전자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유럽연합은 EC(European Commission)가 주최가 되어 유럽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 Info2000 프로젝트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부 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통 정책의 제안, 정부 정보의 상용 활용, 공공 부문이 소유하는 정보 디렉토리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다.

1995년 정보화 사회에 관한 G7회의에서 제안된 "Government Online" 프로젝트도 정부의 전자 정보 관리 및 제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공 부문 정보에 대한 정책의 요체는 공공 부문의 보유 정보 자료 관리 효율성 제고, 민간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공공부문 정보 자료에 대해 자유로운 활용을 통한 민간 정보 산업의 발전, 일반 국민의 공공 부문 정보 접근의 편의성 극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 국가정보 자원 종합 관리 체제의 정비

최근 선진국의 정보 유통 정책은 공공 부문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로서 유통시키는데 더욱 집중하여 이를 국가 경쟁력 확대의 돌파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의 기본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비록 사업 초기에 4년이라는 한시적인 계획과 다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올해로 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 해외 각 국가의 공공 부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정책이 발표되며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국내 정보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지난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 중 기초 자료 조사와 과제 선정의 경험에 따른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제반 현황을 본다면,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기본 사상은 어떠한 타이틀이나 어떠한 전담 기관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국가 정보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정보 자원 종합 관리의 기본 사상은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보고 이 하부 조직에서 발생, 수집되는 정보가 정리, 가공되어 디지털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전달 될 때까지 전체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부 조직간의 자율적이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한 정보 유통은 그 흐름을 파악하여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 체되어 있는 부문에는 법/제도, 예산, 인력, 기술을 지원하여 국가라는 큰 조직내에 원활히 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을 통하여 충분한 시행 착오를 겪었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경험이 새로운 계획으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국의 빠른 움직임으로 보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생활패턴이나 교육환경 등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뀔 미래 정보사회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때이다.